

세계지방자치동향



자치행정

- (한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변화
- (일본) 코로나 사태와 향후 일본의 지역활성화 대책
-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임팩트 프로젝트(Project imPACT)”
- 전과자 취업 지원을 통한 재범 예방정책

지방재정

- (독일) 독일의 재난지원금 지급체계 및 지방정부의 역할

코로나 사태와 향후 일본의 지역활성화 대책

개요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시한 시정(施政)방침연설을 참조하여 향후 일본의 지역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고자 함
- 그 주요 내용으로 수도권 집중 해소, 성장산업으로서의 농산품 육성, 관광입국의 추진, 도장 사용 문화 개혁, 온라인 업무 확대, 지방은행 개혁, 고향납세 활용 등을 들고 있음

시정방침연설의 구성과 지방정책의 자리매김

- 일본에서 역대 최장기 정권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2012년 12월~2020년 9월)에 이어 2020년 9월 16일 탄생한 것이 스가 정권임
- 스가 총리는 2021년 1월 18일 소집된 제204회 정기국회(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参議院) 본회의)에서 일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시정방침연설(이하 시정방침)을 하였음
- 시정방침의 내용 구성을 보면,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2) 동일본 대재해로부터의 부흥 및 재해대책, 3) 장기간에 걸친 과제(그린사회 실현, 디지털 개혁, 기술혁신, 국제금융 거점)에 대한 해답 모색, 4)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 방안, 5) 저출산 대책과 사회보장의 장래, 6) 외교·안전보장, 7) 맺음말로 총 7개의 절(節)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제4절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 방안’을 언급한 곳에 향후 일본의 지방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시정방침 전체의 골자

-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에서도 이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났음
- 시정연설에 나타난 지방대책 이외의 내용에 대한 골자를 항목으로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킬
 - ② 국민에게 자유행동 제약을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

- ③ 코로나19에 보다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조기 제출
- ④ 백신 접종을 2월 하순까지는 개시
- ⑤ 2035년까지 신차 판매에 있어 전기차의 비율 100% 달성
- ⑥ ‘디지털청’을 2021년 가을까지 시동
- ⑦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 ⑧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킴

수도권 집중의 해소

- 일본에서는 수도권을 ‘도쿄권’ 또는 ‘1도 3현’(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치바현(千葉県), 사이타마현(埼玉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한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일본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1억 2천 6백만명, 2020년말 시점)의 4분의 1 정도가 모여 있음
- 그럼에도 시정방침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집중 해소를 통한 지방활성화를 그 과제로 들고 있음
- 나아가 지방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일본 전체가 건강해진다고 언급하고 있음

성장산업으로서의 농산물 육성

- 일본 농산품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 인기가 높아 농업은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일본 농산품 수출액은 2019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 2025년 2조엔(약 22조원), 2030년 5조엔(55조원)의 농산물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소고기, 딸기를 비롯하여 27개 중점 품목을 선정하고 국가별 목표 금액을 정해 산지를 지원
- 주식용(主食用) 쌀이라는 영역을 넘어 쌀을 고수의 작물로 전환하고, 삼림(森林) 뱅크, 수산물 양식(養殖)의 추진 등을 통해 농림수산업이 지역을 리드하는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
- ‘산림 뱅크’라 함은, 삼림 소유자가 삼림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시정촌(市町村)에 관리를 위탁하고 시정촌은 삼림을 집약화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간벌(間伐), 벌채 등의 관리를 사업자에게 일임한 다음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삼림 소유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말함

관광입국의 추진(1): 시설 리뉴얼 및 비활용 미술품의 지방 대여

- 일본에는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매력을 이끌어내는 ‘자연, 기후, 문화, 음식’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재차 관광대국 일본을 목표로 함
- 단기 집중 추진책으로 호텔, 여관, 거리 재생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약 100개 지역을 대상으로 폐옥(廢屋)을 철거하고 매력 있는 시설로 리뉴얼함
- 일본 황실 연고의 산노마루쇼조칸(三の丸尚藏館: 도쿄 황거(皇居)에 있는 박물관 시설)에 소장하고 있는 2천 점 이상의 국보·중요문화재급의 미술품을 지방에 대여하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지역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립공원 자연 속 숙박 체험, 성(城)·절(寺)·신사(神社)·고민가(古民家)에서의 체재 등을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이나 워크케이션(Work and Vacation의 합성어)을 지원함

관광입국의 추진(2):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 지역 특색이 있는 니혼슈(日本酒), 쇼쥬(焼酎) 등의 전통주를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함
- 2020년 개업한 우포포이(ウポポイ: 홋카이도(北海道) 선주(先住)민족인 아이누 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국립시설)를 통해 아이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확충하여 관광 기폭제로 삼음
- 2021년 여름 전면 개통되는 오키나와(沖縄) 나고히가시(名護東) 도로를 이용하여 추라우미(美ら海)수족관이나 세계유산인 나키진(今帰仁) 성터 접근성을 개선함

교부금 및 포인트 부여를 통한 도쿄도 일극(一極) 집중의 시정

- 최근 23년 동안 도쿄도로의 인구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인구가 늘어났으나, 2020년 여름 이후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지고 있음.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온라인 업무가 늘어나면서 도쿄를 떠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임
- 향후 지방의 온라인 기반 시설을 더욱 정비하여 도시로부터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도함
- 2021년도까지 낙도(離島)를 포함해 전국적인 광섬유 통신망을 정비하고 텔레워크의 환경을 갖추어감. 이를 위해 최대 백만엔(약 1,100만원)의 교부금, 주택 구입 시 최대 백만엔 분의 포인트 부여로 지방 이주 희망자를 지원함

도장 사용 문화 개혁, 온라인 업무 확대, 지방은행 개혁, 고향 납세의 활용

- 일본의 행정 처리에서는 도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도장 사용 문화가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인식 하에 도장 사용 문화를 없애가겠다고 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하여 진료나 약(藥) 처방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여름까지 그 골격을 마련함
- 정부가 펀드를 통해 대기업 업무 경험자를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인재로 소개함. 이를 위해 우선 은행으로부터 시작하여 향후 3년에 걸쳐 대상 업종을 늘려 1만명 규모로 확대하여 감
-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은행의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해 일본은행과도 연계하면서 지방은행 통합을 지원함
-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납부할 주민세액으로부터 공제하고 있는 고향납세 제도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음
-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향납세 공제액도 90%까지 인상하고 있으므로 많은 기업이 고향납세를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 활성화로 이어가고자 함

시사점

- 디지털 업무 환경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앞서 있으나 지역 특색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음
- 디지털화를 추진해 간다고 하더라도 콘텐츠가 다양해야 지역활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유리함
-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면 한국이 어떻게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확보하여 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임
- 한국으로서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 퇴직자들의 지방 정착이 용이하도록 하여 이들 인재를 활용하는 것도 지역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국중호 통신원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kook@yokohama-cu.ac.jp